

“지역안배 고려 뿌리산업 발굴 노력을”

도의회 농산경위, 올 하반기 업무보고… “뿌리산업,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분야”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0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 전북테크노파크자동차융합기술원, 예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농산경계위원회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하반기 도정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수 위원장(정읍)은 “혁신도시 교통과 주차시설이 열악해 주변지역과의 교류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을 지적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교통체계 개편과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주차시설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완주)은 “혁신도시 기지제 주변 주차시설이 열악한데, 관련 시·군과 협력해 조속히 주차시설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홍보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송성환 의원(전주)은 뿌리산업 특

화단지 지원사업과 관련해 뿌리산업은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분야인데, 적극적인 신규발굴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도내 지역안배를 고려,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호윤 의원(전주)은 전북 디자인센터와 관련 “지난 과오 및 부족한 점에 대해 각별히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과 개선이 필요한 점은 세부적이고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최후열 의원(부안)은 “드론산업과

관련해 연구용역 수임이 늦었지만, 사업방향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은 “군산이 조선산업으로 특히 어려운데, 특수목적선이 특새산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관련해 연구특구진흥재단 전북본부에 도내 출신 채용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련의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미세먼지 외부 발생 대책 마련을”

도의회 환복위, “도내 자체 발생물보다 타지역 발생이 문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0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환경녹지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대해 소관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연간계획을 세우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도내 미세먼지 자체 발생량보다 타지역 발생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외부 발생 대처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석 의원(김제)은 혁신도시 약취지갑대책 추진과 관련해 김제 용지 축산시설 약취실태조사자 진행되고 있는데 “약취지갑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줄 것과 김제 용지 축산업체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익산 왕궁 현업조사 매입 및 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추진중인 태양광조사 용역과 같은 사전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수질개선과 약취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은 폐공처리된 지하수의 철저한 관리와 원상복구를

통해 오염원이 침투하지 않도록 도내 폐공 지하수 전수조사와 진행과정 보고를 주문했다.

나기학 의원(군산)은 도에서 지난 2017년부터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누수탐사, 불룩구수 등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전북 누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높아 누수율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미등록 지하수 관리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접지역인 충청도 공항 건립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가리비 양식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신규허가를 위한 절차와 지원”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비례대표)은 신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전기자동차 연간 보급계획량 600대 중 186대에 불과한 저조한 보급률”을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으나, 탄소저감 효과를 고려했을 때 공공 전기자동차의 미비한 효과”를 지적하면서 공공전기자동차 구입대수와 운행거리 자료를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이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리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체계화된 영농부산물 수거 시스템 구축 필요’

국주영은 도의원, 불법 소각 문제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새만금 바이오가스 플랜트 설립 부산물 자원화 등 제시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보리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영농부산물의 소각은 불법이다. 또, 최근 보리대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주 의원은 “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분야 전문가와 농민 행정이 모여 영농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먼저,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보리, 밀,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15만6,708호로 전국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농부산물의 수거체계가 미

흡하고 병충해 방지 등의 관행상 이유로 경작지에서 불법소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실태를 설명했다.

이경수 전주시 농민회장은 “농민들은 부산물 소각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당장 보리나 밀을 수확하고 다음 모내기 준비해야 하고, 특히, 올해는 보리 수확기인 5~6월에 비가 자주 와 보리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 당장 경작지에서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전임 활동가는 “영농부산물의 소각 문제를 단순히 농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모르고 불법 소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행정에서 영농부산물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촌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대학교 김세훈 박사는 “앞으로 영농부산물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립해 영농부산물을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에서 파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각희 농민은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리대 등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유기농퇴비로 활용하는 순환농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새로운 밀, 보리 대체 소득작목을 발굴·육성하고 경관농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영농부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수집해 순환농법에 활용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상생형 일자리 생산 전기차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방안 모색해달라”

행자위, 하반기 업무보고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0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등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올해 초 선정된 군산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명신과 대창퍼스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를 도·시·군·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은 인력담당관 전문능력 채용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현재 세계잡퍼대회 지도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2023년 대회 기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실시해야 지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찬 의원(고창)은 내륙철도(안성권 등 전북도 초광역 협력체계 추진)에 대해 묻고, “타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계획해 나갈 때 추진 도중 사업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우리도가 추구하는 바를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메타버스 활성화 시군과 TF 협의체 구성해야’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20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 “(주)팩스트의 공모주 모집 당시 약 5,577,000억원이 몰리는 등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내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타버스’란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용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과 TF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한, 전북형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성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발굴되면, 전북의 매력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콘텐츠 개발과 기존 정책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뜻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문건위 “장마 대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철저”

“도내 배수시설, 집중호우 감당 어려워… 재난안전 매뉴얼 재검토”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20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의 2021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 위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저류지 설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사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입을 모아 당부했다.

최영규 의원(익산)은 7월초 발생한 익산 중앙시장 침수피해에 대해 “재난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적극행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각종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TF팀을 구성해 신속한 대응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광근 의원(전주)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를 많이 찾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밀접시설인 무더위

쉼터의 방수수칙과 인원제한 등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그는 “현재 추진중인 무더위 쉼터 운영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단거적인 대책보다는 취약계층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근본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은 “기존 강수량 통계로 설계된 도내 배수시설이 집중호우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통한 재난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은 “전주 남부시장 둔치주차장의 차량 침수위험이 신속 인입시스템 구축사업이 정비까지 작되기전에 완료되지 못해 기존 방식대로 현관관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내년에 추진될 3개소는 올해 임을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를 많이 찾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밀접시설인 무더위

민주 윤준병 의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관리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2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일시적 대피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사업 예산 통합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

민주 신영대 의원, 법안 발의 새만금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새만금 사업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나 책임 운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제인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지난 30년의 부진을 딛고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한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간 연계, 우선순위를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만금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99'로